KCTULI 워킹페이퍼 | 2024-01

2024. 1. 24.

은행 고수익 논쟁을 통해 본 은행업의 구조적 문제

자금조달의 사회적 성격 불구 이윤극대화 차원의 자금운용

초록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 고수익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은행의 본원적 역할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적 접근은 부족하다. 이 보고서는 은행업의 재무적 특성과 수익구조 분석을 통해, 은행업의 구조적 모순은 자금조달(수신)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 차원의 자금운용(여신)이라는 이해상충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한편 이윤극대화 차원의 자금운용은 가계부채의 급증과 주택가격 버블 그리고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순이익 중 주주의 몫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은행법에 주주 배당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hanjin444@hanmail.net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221
- 팩스: 02-2670-9299
- 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발간물은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목차

<요약> ····· 3

1. 정치적 셈법으로 변질된 은행 공공성 논의 ····· 4

2. 은행 경영실태 및 구조적 모순 ····· 6

1)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은행업에 미친 영향 ····· 6

2) 이윤극대화 차원의 자산운용 ; 가계부채 확대와 주택시장 버블 ····· 7

3) 은행의 주된 수익원 '이자수익' ····· 12

① 국내은행 현황 및 재무적 특성 ····· 12

② 은행 수익 현황 및 구조적 특징 ····· 13

③ 고용감소·점포축소 등 사회적 의무는 소홀 ····· 17

3. 배당한도 명문화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 ····· 18

요약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 고수익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뿐, 은행의 본원적 역할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적 접근은 부족하다.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발상은 과도한 신용창출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금산분리 원칙의 무력화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횡재세는 비정상상적 상황에서 부당하게 올린 수익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 은행 관련 이슈는 한시적 세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여된 은행의 역할은 여·수신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량의 신용(신용화폐)을 창출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은행업의 구조적 모순은 자금조달(수신, 국민의 예·적금)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여신, 대출)의 주된 목적은 이윤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전체 국내은행의 경우 총자산 중 부채 비중은 92.8%이며, 시중은행으로 한정하면 부채 비중이 93.6%에 달하는 등, 은행 보유자산 대개가 국민의 예·적금으로 부채에 해당한다는 고유한 재무적 특성을 지녔다. 그럼에도 자금운용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주주)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를 야기하는데, 은행의 주된 수익원인 이자수익은 특화된 영업 전략이나 서비스의 차별성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맡긴 예·적금 규모에 좌우된다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시중은행 순영업수익(약 31.8조원) 중 순이자수익(31.5조원) 비중이 99.3%에 달했다.

한편 이윤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신용창출(대출)은 가계부채 급증과 과잉유동성으로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8년 말 723.5조원이었던 가계신용은 2023년 9월 현재 1,875.6조원으로 2.6배 늘었는데, 누증된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2014년 4억 8,720만원 수준까지 안정화되었던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2022년 12억 7,380만원까지 급등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고 점포 또한 축소되면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신용 서비스 이용 기회의 불평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의 구조적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은행 순이익 중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도를 은행법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순이익 중 주주의 몫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주주이익을 제한하게 되면 자금운용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이윤을 늘리려는 유인이 줄기 때문에, 은행의 거시건전성과 안정성이 향상됨의 물론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 둘째, 신용창출과 신용질서 유지라는 은행의 공적·사회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정치적 셈법으로 변질된 은행 공공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된 ‘은행 공공재’ 논쟁은, 2월에는 “고금리로 힘든 와중에 은행들은 돈 잔치와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1]”는 질타로 이어졌고, 종국에는 ‘갑질’과 ‘종노릇[2]’이라는 원초적인 단어까지 동원되면서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은행의 공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되새겨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그 해법으로 ‘독과점 체제 해소’를 운운한 순간, 윤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은 상생금융이나 공공성 강화는 아니었다. 은행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여 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나 대기업집단의 은행업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 창출과 신용 질서 유지라는 은행의 본질적 역할을 생각한다면, 은행의 경쟁 체제는 과도한 신용 창출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3]”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고금리 상황이어서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이익도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횡재세의 취지 자체가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의해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전시 또는 경제 위기,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과되는 일시적인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일시적 성격의 횡제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은행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신용을 창출시키는 작금의 경영행태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은행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그러한 경영행태를 가능케 한 은행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 노력이나 개선 의지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야의 문제제기는 그저 여론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은 현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분노라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은 상위 1% 만의

1) 파이낸셜뉴스 ‘돈잔치 질타에 몸사리는 은행...불붙은 금리인하 전쟁 최대 0.7%p 뚝’, (2023.02.21.)
2) YTN '[취재앤팩트] 종노릇·갑질·독과점...연이은 尹 저격에 속 타는 은행권(23.11.03)' 기사 중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3) CBS 노컷뉴스 ‘은행 횡재세, 전문가들 왜 회의적일까?’ (23.11.20.)

이익을 위한 것이며, 자산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지목되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4]'는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된 바 있다. 당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과 양극화에 대한 대중들의 문제제기로, 보다 정의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대안적 금융시스템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아직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무금융노조 우분투 재단의 연구보고서 '한국의 금융 불평등(2023)[5]'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본격화된 금융 불평등(특히 부채 이용 기회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특히 자산 불평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는데, 금융기관은 이윤극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금융 불평등은 금융기관 경영의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여·수신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신용(신용화폐)을 창출하는 등 현대 경제시스템의 핵심적 인프라(Infra)로 기능한다. 은행 서비스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라는 점에서, 타 금융권이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로 인해 은행업은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진입장벽 규제가 존재한다.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향상'과 '예금자 보호 및 신용 질서 유지'라는 은행업의 공적 · 사회적 역할은 은행법 제1조(목적)[6]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은행은 여수신 기능에 의한 신용창출과 신용질서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부여받았지만, 정작 자금운용의 주된 목표는 이윤극대화(주주이익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구조적 이해상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은행 공공성, 즉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현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4) 2011년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발생한 시위로, 빈부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에 항의한 시위였다. 월가는 세계적인 증권회사 및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거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미국의 금융 중심가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반 월가 시위는 전 세계로도 확산되었는데, 2011년 10월 15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지정하여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전 세계 82개국 1000여 개 도시에서 반 월가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5) '한국의 금융불평등(신광영· 김상봉· 정준호, 2023), 사무금융우분투재단

6) 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은행 경영 실태 및 구조적 모순

1)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은행업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금리자유화[7] → 대출의 증권화(자산유동화)[8] & 파생상품화 → 금융기관의 겸업화 및 대형화'라는 경로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금리자유화의 결과 신용창출에 기반하여 자금중개와 신용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경제 주요 인프라로서 기능했던 은행들이 일반 기업들처럼 자유로운 이윤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금리자유화 이전에는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정부 및 금융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었지만, 개별 은행들이 시장의 자금 수급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서, 은행의 주된 경영 목표 또한 수익 극대화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산유동화(대출의 증권화, securitization) 기법의 발달로 은행은 예금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예금 총량을 넘어선 대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은행의 주된 수익 기반은 예대마진(대출 이자수익 - 예금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대출 총량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점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은행 대출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가 급진전되면서 보험이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 은행의 겸업화도 본격화되었다. 은행은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 점포를 활용하여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지만, 금융투자상품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2008년 '키코(KIKO, knock in-knock out)[9] 사태'나 2019년 '라임자산운용 및 DLS(파생결합증권, Derivative

7) 금리가 시장의 자금 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금융 불안이 반복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규제 정책의 하나였음. 하지만 1970~1980년대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세계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함.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 예금 최고 금리가 제한되었었는데, 1980년대 일련의 자유화 조치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됨.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리 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됨.

8) 은행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 기법에 의해 증권화시킨 것으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능함. 미국의 MBS(모기지 증권)도 ABS의 일종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은 자산보유자(주로 금융기관)가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이 증권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된다는 특징을 지님.

9)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미리 정한 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같은 고정환율에 매도해야 한다는 옵션이 붙고,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환손실을 입는 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됐다.

Linked Securities)[10] & DLF(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11] 사태', 2023년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ies)[12] 사태' 모두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라는 사회적 책무를 지녔던 금융기관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회사로 변신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자본의 축적이 생산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13]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맞다[14]"고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은행은 자산유동화를 통해 예금 총량을 넘어서는 신용을 창출하여 시중에 과잉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버블의 단초를 제공했다.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 매각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나 구조화 증권인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험을 확산 · 전이시켰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보유자산의 부실 위험을 헤지(hedge)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위험의 크기를 넘어서는 규모로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불이행스왑)를 상호 간에 거래했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순간 금융기관은 물론 채무자로 전락한 대중 모두가 공멸 위험에 처했다. 금융기관들은 구제금융으로 다시 살아나 1%의 부자가 되었지만, 납세자인 대중들은 99%의 빈자(貧者)로 전락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통화와 금융 체제의 개혁을 위한 유엔총회 전문가 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대안적 금융 체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 시기는 한마디로 '낡은 것이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탄생하지 않은 시기[15]'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사회는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만들어 냈다. 금융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미시 · 거시 건전성 규제는 물론 신용파생상품과 스왑에 대한 규제, 글로벌 규제와 초국적 금융과 자본의 통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그 방향성이다. 우리 사회 또한 은행(금융)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소통과 토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0)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은, 원유, 곡물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등의 기초자산 가격변동과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11)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
12)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13)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은 물론 주택, 식량, 원자재 등 세상의 모든 것을 금융 상품화함, 즉 증권이나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거래됨. 기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인수합병(M&A)이 범위의 경제나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면, 금융화 시대의 M&A는 시세차익(capital gain)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임.
14) '이명박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맞다', (이데일리, 2008.01.07)
15)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궐위기(interregnum)

2) 이윤극대화 차원의 자산운용 : 가계대출 확대와 주택시장 버블

금리자유화 이후 예대마진에 의한 이윤추구가 자유로워진 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아래 '[그림1] 예금은행 총예금 · 총대출 및 예대율 추이'를 보면 국내 예금은행 총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하 '예대율[16]'이라 한다) 추이를 보면, 2004년에는 104.6%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35.8%까지 늘어났다. 금융위기 이후 예대율 규제를 재도입하면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2022년 말 기준 110.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데는 규제 완화와 함께 자산유동화와 은행채 발행 등 예금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림 1] **예금은행 총대출과 총예금 및 예대율 추이** (단위 : 십억원,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 : 총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합산한 값이며, 총대출은 산업별대출금과 가계대출의 합산.

한편 금융자유화는 역사적으로 자금의 공급자였던 가계 부문을 자금의 주된 수요자로 변화시켰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은행의 대출 수요자는 주로 기업이었으며, 가계 부문은 저축을 통해 자금의 주된 공급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은행의 주된 영업 전략은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Retail Banking, 개인금융)으로 전격 변화했다.

16) 예대율 규제는 1998년 11월까지 경영지도비율로 존재하다가, 은행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들의 치열한 대출 경쟁을 자제시키려는 목적에서 2012년 12월 재도입했다. 현재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의 비율을 100%로 규제하만,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22년에도 금융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105%), 저축은행(110%)로 완화한 바 있다.

실제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 1999년 이후 2022년까지 기업대출은 100.2조원에서 586.1억원으로 5.9배 늘어났지만, 가계대출은 60.2조원에서 599.9조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은행이 자금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대출은 회피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개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대출에 집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규제 완화라는 경영환경 변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의 효율적 중개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은 외면하고,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한 이윤극대화 전략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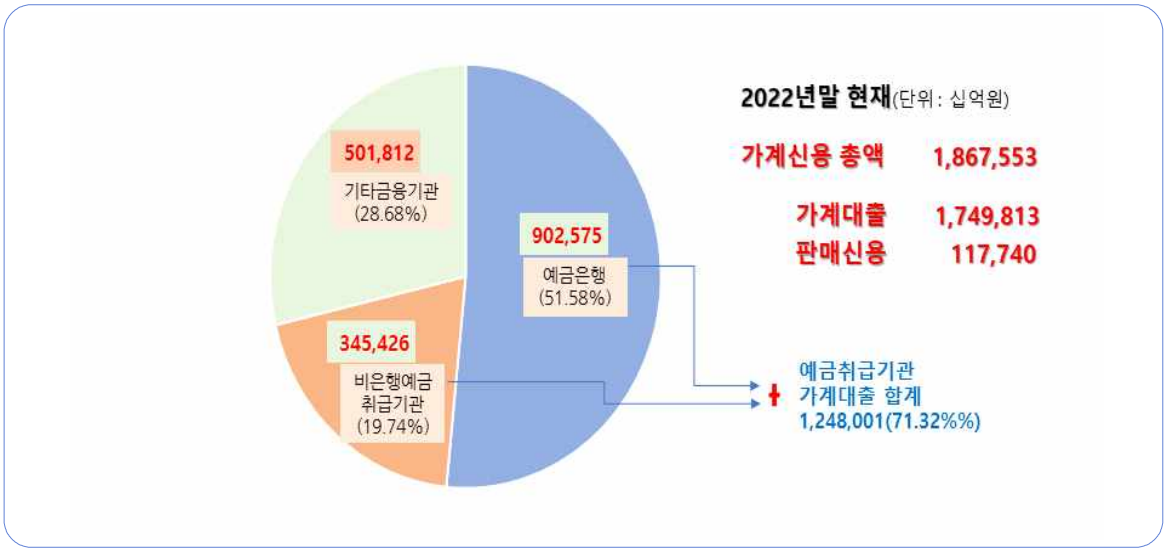
[그림 2] **시중은행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추이**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도별 시중은행 부문별 대출금의 합계액)

은행이 대출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여 고용을 늘리고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역할을 기대했지만, 은행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계 부문을 자금의 수요자로 전락시키면서 한국경제의 잠재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가계가 소비의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지속하여 크게 늘고 있는 현 상황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또한 점차 커지면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어 가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가계신용 총액은 1,867.6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51.58%에 달하는 902.6조원이 예금은행의 대출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면 1,248조원으로 가계신용의 71.32%가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신(예·적금) 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신용은 501.8조원으로 전체 신용의 28.7%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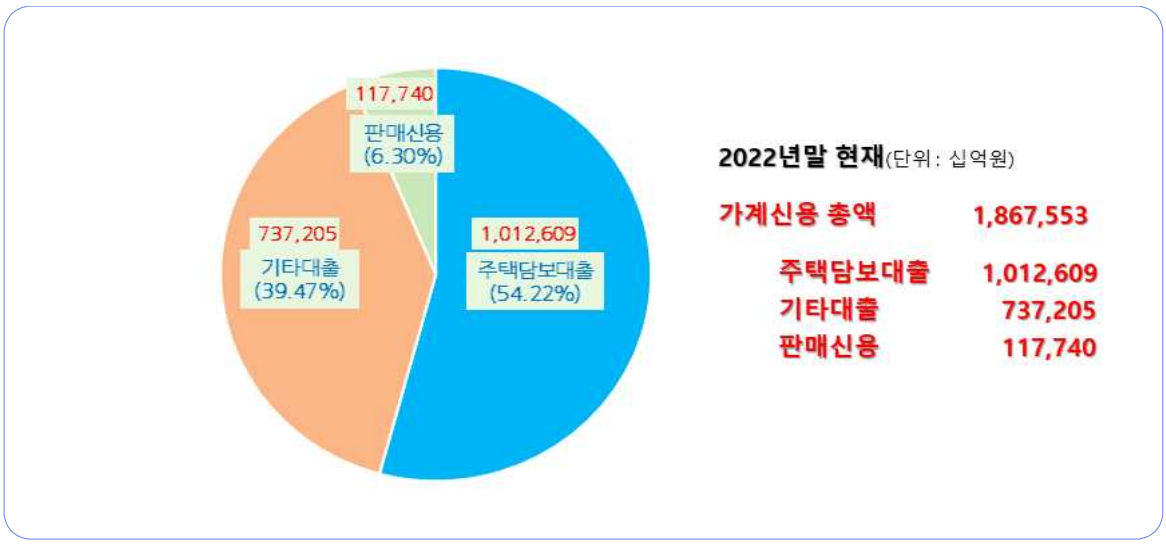
[그림 3]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단위 : 십억원)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지칭하며.
  기타금융기관은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을 포함.

2022년 말 기준 1,867조원의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4.2%로 1,012.6조원에 달했다. 737.2조원에 달하는 기타대출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았을 뿐 상당 부분 그 용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등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은 대개가 부동 자금화 되는 등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택가격의 버블이다.

[그림 4] 용도별 가계신용 현황 (단위 : 십억원)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2014년 이후 급등했다. 2014년 4억 8,720만원에 불과했던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2022년 12억 7,380만원까지 올랐다. 불과 8년 만에 2.6배가 상승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긴축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11억 9,957만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4년과 비교할 때 여전히 2.5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주택가격이 급등한데는 꾸준히 늘어난 가계대출의 영향이 컸다. 2008년 말 723.5조원에 불과했던 가계신용은 2023년 9월말 현재 1,875.6조원으로 2.6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과도하게 신용을 창출했고, 이로 인해 시중에 누적된 과잉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은행의 과도한 신용창출이 주택시장 버블을 만들었고,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한 순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축소(Deleveraging)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5] **가계신용 및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 추이** (단위 : 십억원, 만원)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KB부동산 통계에 의거 산출
- 주1 : 가계신용은 각 년도 12월만 기준이며, 2023은 3Q 기준.
- 주2 :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월별 데이터를 연평균 한 값이며, 2008년은 12월 평균 매매가격임.

문제는 가계부채가 향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세계적으로 통화긴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라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됨은 물론, 가계대출의 상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가 신용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은행의 주된 수익원 '이자수익'
; 예·적금에 의존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 순이익 중 주주의 몫은?

① 국내은행 현황 및 재무적 특성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총 20개이며, 일반은행은 15개와 특수은행 5개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은행은 다시 시중은행(6개)과 지방은행(6개) 및 인터넷전문은행(3개)으로 구분된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특별한 단행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 고객을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이후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인데, 그 이유는 ①전국적으로 오프라인 영업 점포를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②국내은행 총자산에서 시중은행 총자산이 55.3% 달하는 만큼 은행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국내 은행 현황

일반은행 (15개)			특수은행 (5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6개)	인터넷전문은행 (3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3.06기준)

은행의 재무상태를 보면, 일반 기업과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대개 국민의 예·적금)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보듯이 20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보면, 전체 총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92.8%에 달한다. 자기자본(자본총계) 비중은 7.2%, 자본금은 2.1%에 불과하다.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하면, 총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93.6%, 자기자본 비중은 6.4%로 국내은행 전체를 합산한 경우보다 부채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금 비중은 1.1%로 은행 전체 평균 비중보다 현격하게 낮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유업체 SK이노베이션의 재무상태와 비교하면 은행업만의 재무적 특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형적인 사적 기업(private enterprise)으로서의 SK이노베이션은 총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18.3%에 불과하고, 자기자본 비중이 81.7%로 대

개 자기자본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업의 이러한 재무적 특성 또한 은행은 근본적으로 일반 사적기업과는 다른 성격을 지녔음을 증명하고 있다.

[표 2] **은행업 요약 재무상태** (단위 : 십억, %)

구 분	국내은행 전체		시중은행		SK이노베이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산총계	3,569,903	100.0	1,975,717	100.0	19,550	100.0
부채총계	3,313,001	92.8	1,849,097	93.6	3,581	18.3
자본총계	256,902	7.2	126,620	6.4	15,969	81.7
[자본금]	[73,720]	[2.1]	[21,795]	[1.1]	[468]	[2.3]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22.12 기준)

위와 같은 재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들처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은행이 보유한 신용 창출 기능으로 인해,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도하게 대출을 늘리게 되었을 경우, 과잉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경제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신용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개인 · 기업별로 불평등하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은행 수익은 특화된 영업 전략이나 서비스의 차별성에 의해 창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의 주된 수익원은 이자수익인데, 이자수익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맡긴 예·적금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는 문제는 순이익 중 주주의 몫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회적으로 부여된 수신 기능(예·적금)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자금 운용은 이윤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해 상충의 문제, 즉 구조적 문제'이다.

② 은행 수익 현황 및 구조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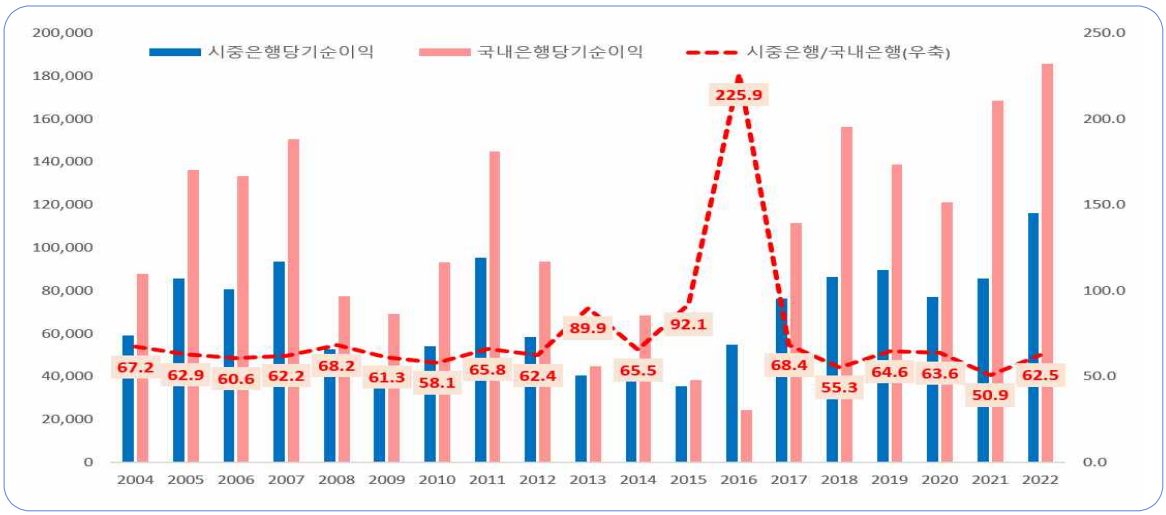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국내은행 및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면 [그림5]와 같다. 해당기간 시중은행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6조 9,992억원으로, 국내은행 전체 연평균 당기순익 10조 7,571억원 대비 65%의 비중을 보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시중은행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9조 988억원, 국내은행 전체적으로는 15조 4,100억원으로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됐던 2022년에는 시중은행 당기순이익은 11조 6,108억원, 국내은행은 18조 5,684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의 경우에도 은행의 수익성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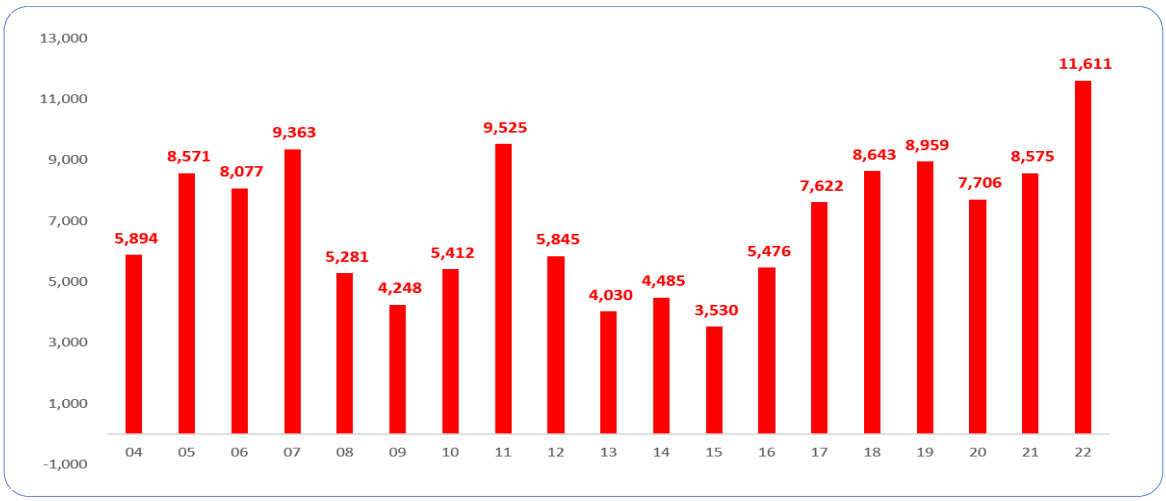
시중은행 당기순이익(그림6 참조)만 따로 살펴보면, 2004년 약 5.9조원에서 2007년 약 9.4조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수익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추세가 전환되면서 다시 크게 늘고 있다.

[그림 6] **국내은행 및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 시중은행 비중** (단위 : 억원, %)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주 : 각 연도별 국내은행 및 시중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의 합계액.

[그림 7]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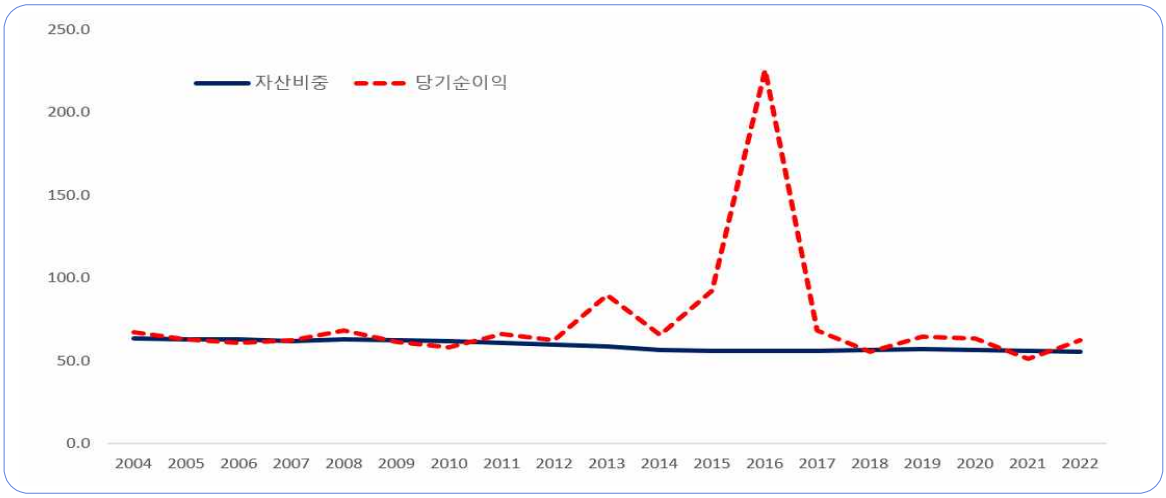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주 : 각 연도별 전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의 합계액.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5.0%에 달하는 반면, 해당기간 전체 국내은행 연평균 총자산에서 시중은행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8.2%[17] 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여타 국내은행에 비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은행 수익은 총자산 규모에 비례한다는, 즉 수신(예·적금) 총량에 좌우된다는 사실은 [그림7]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체 국내은행 대비 시중은행의 자산 및 당기순이익 비중이 유사한 궤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체 국내은행 총자산에서 시중은행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말 63.5%에서 2022년 말 55.3%로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전체 국내은행 대비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2016년 등 몇 개 년도를 제외하고는 자산 비중의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궤적에서 크게 벗어났던 2016년의 경우에는 특수은행인 산업은행(▽3.6조원)과 수출입은행(▽1.4조원) 등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결과였다.

[그림 8] **전체 국내은행 대비 시중은행의 자산 및 당기순이익 비중** (단위 : %)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근거 산출
- 주 : 각 연도별 전체 국내은행 대비 시중은행 자산 및 당기순이익 비중.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요약손익계산서(은행계정)에 따르면 은행 영업부문은 크게 ①이자 ②수수료 ③기타영업이라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각 영업부문별 수지 차(수익- 비용), 즉 부문별 순수익(그림8 참조)을 보면, 은행의 순수익은 대개가 이자수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자수익은 기본적으로 총여신(대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에서 총수신(예·적금)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을 차감한 값이라 할 수 있다.

순이자수익은 2016년 약 19.1조원에서 해마나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22년 31.5조

17) 2004년~2022년 전체 국내은행 연평균 총자산은 20,606,911억원, 시중은행 연평균 총자산은 11,987,596억원.

원으로 65.2%가 늘어났다. 순수수료 수익은 2016년 약 3.0조원 2022년 3.1조원까지 큰 변화 없이 3조원 초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기타영업수지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기간 중 내내 적자 추세를 보였는데, 적자규모는 2016년 약 -1.4조원에서 2022년 -2.8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림 9] **시중은행 영업부문별 수지 차(수익-비용) 추이** (단위 : 십억원)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주 : 각 연도별 전체 시중은행 영업 부문별 수지 차(수익-비용).

순영업수익 대비 순이자수익 비중 또한 은행 순수익은 대개가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순영업수익은 순이자수익과 순수수료수익 그리고 순기타영업수익 모두를 합산한 값으로, '판매비와관리비' 차감 전 영업이익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시중은행의 순영업수익 대비 순이자수익 비중은 92.4%였으며, 2022년에는 99.3%까지 상승했다. 해당 기간 중 순이자수익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17년에도 순이자수익 비중은 87.0%에 달했다.

[표 3] **시중은행 순영업수익 대비 순이자수익 비중** (단위 : 십억,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이자수익	19,096	20,687	22,525	23,300	23,251	25,805	31,549
순영업수익	20,660	23,774	25,668	26,606	25,437	28,009	31,759
이자수익비중	92.4	87.0	87.8	87.6	91.4	92.1	99.3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순영업수익(= 순이자수익 + 순수수료수익 + 순기타영업수익)은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전 영업이익.

자본시장에서 은행 관련주는 보통 고배당주로 분류된다. 실제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2022년 배당성향을 보면, KB금융(26%), 신한금융(23.5%), 하나금융(27.%), 우리금융(26%) 등으로 매우 높았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컨센서스를 취합해 추산한 4대 금융지주의 2023년 예상 배당성향은 전년 대비 0.76%p 상승하여 평균 26.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주사별 2023년 예상 배당성향은 하나금융(27.72%), KB금융(27.49%), 우리금융(26.75%), 신한금융(24.45%) 등 이었다.(the bell, 23.11)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라는 점과 금융지주회사의 배당 재원이 주로 은행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은행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주주의 몫으로 환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4대 금융지주 배당성향 추이** (단위 :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KB금융	26%	20%	26%	26%
신한금융	26%	23.5%	26%	23.5%
하나금융	26%	20%	26%	27%
우리금융	24.8%	19.9%	21.1%	26%

- 자료 : the bell '상생금융에 돈 쏟아붓는 은행…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 (2023.11.27)

2022년 기준 시중은행 총자산에서 부채(주로 고객의 예·적금)가 차지하는 비중이 93.6%에 달하며, 주주 자본금 비중은 1.1%에 불과하고, 2022년 순영업수익 대비 순이자수익 비중이 99.3%에 달한다는 사실은 은행 당기순이익 모두가 주주의 몫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은행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적금 등 자금조달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운용은 이윤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해 상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③ 고용 감소 · 점포 축소 등 사회적 의무는 소홀

2022년말 기준 국내은행 전체 직원 수[18]는 114,034명으로 2018년 119,008명 대비 ▽4.2% 감소했다. 정규직이 ▽6.0%나 줄어들었지만, 비정규직이 19.8%나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폭이 줄었다. 국내은행 전체적으로 고용 규모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시중은행이 정규직을 축소시키면서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었다.

18)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경우 2018년 3/4분기 까지는 직원을 분류함에 있어 '①일반직원(책임자, 행원) ②서무직원 ③별정직원 ④무기계약직원'으로 구분했지만, 2018년 4/4분기부터는 ①정규직원(일반직, 무기계약직), ②비정규직원'으로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규직은 2018년 65,448명에서 2022년 57,181명으로 ▽12.6% 축소된 반면, 비정규직은 3,984명에서 5,764명으로 44.7%나 늘어났다.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은행만을 놓고 보면, 동일 기간 중 정규직은 3.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2.9% 감소하는 등 시중은행과는 정반대 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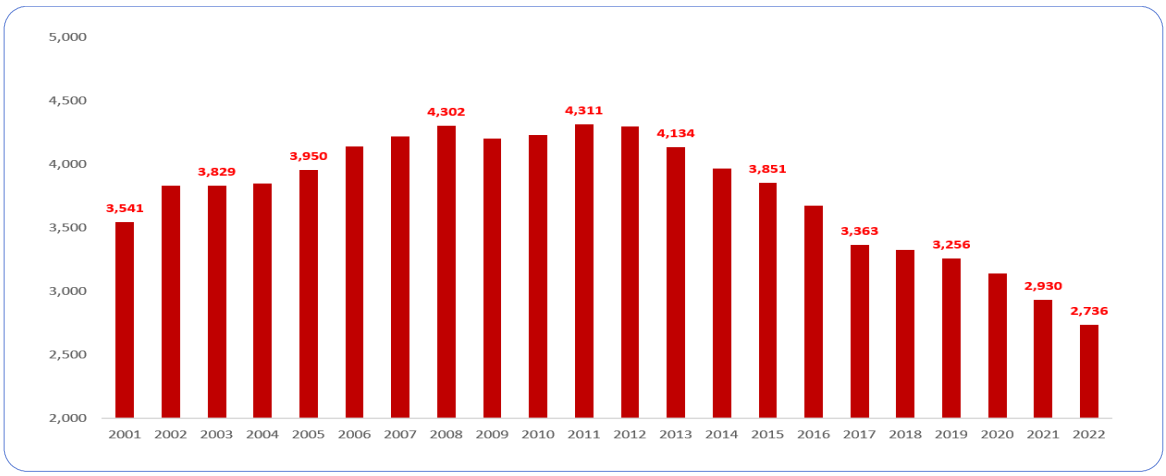
[표 5] **은행 직원 수 변화** (단위 :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시중 은행	정규직	65,448	64,377	62,912	60,337	57,181	-12.6
	비정규직	3,984	4,549	4,447	4,636	5,764	44.7
	소 계	69,432	68,926	67,359	64,973	62,945	-9.3
국내은행 (시중은행 제외)	정규직	45,216	46,034	46,516	46,593	46,855	3.6
	비정규직	4,360	4,209	4,107	4,122	4,234	-2.9
	소계	49,576	50,243	50,623	50,715	51,089	3.1
전체 국내은행 계	정규직	110,664	110,411	109,428	106,930	104,036	-6.0
	비정규직	8,344	8,785	8,554	8,758	9,998	19.8
	합계	119,008	119,169	117,982	115,688	114,034	-4.2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년도 12월말 기준)

시중은행 지점(영업점)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2011년 4,311개로 최고치를 보였던 시중은행 지점 수는 이후 꾸준하게 줄어들면서 2022년에는 2,736개로 최고치 대비 ▽36.5%나 줄어들었다.

[그림 10] **시중은행 지점 수 추이** (단위 : 개)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주 : 각 연도별 전체 시중은행 지점 수 합계.

은행이 지점을 줄이는 배경에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는 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하지만,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무수익(or 저수익) 점포를 폐쇄해 나가려는 경영 전략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은행 지점 축소가 불러온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금융 소외는 지역적으로는 도심 외곽이나 낙후 지역 그리고 지방 등 취약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대개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의 소득 및 자산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은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지점 수를 축소시켜 금융소외를 야기하는 등 본연의 사회적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

3. 배당 한도 명문화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결과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노인 및 청년세대의 빈곤 확대, 고용 위축, 저출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위기[19]'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은행 독과점 체제 해소나 횡재세' 등과 관련한 논쟁은 정작 은행의 구조적 모순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다.

은행의 구조적 모순은 자금 조달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운용은 이윤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해상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은행의 구조적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금융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점포가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 당기순이익 중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고한도를 은행법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은행 수익 대개가 국민의 예·적금, 즉 수신에 근거하여 창출되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지만, 순이익 중 주주의 몫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 주주이익을 제한하게 되면 자금운용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이윤을 늘리려는 유인이 줄기 때문에, 은행의 거시건전성과 안정성이 향상됨의 물론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셋째, 신용창출과 신용질서 유지라는 은행의 공적 ·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업의 특성상 이윤추구는 사회적으

19)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란 기존의 지배계급이 장기간 치유가 어려운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는 경우를 지칭함.

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무자본특수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형태로 공공기관화 하는 동시에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용의 총량 또한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경우 국유화를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20)]

20) 미국의 경제학자 Fred Moseley는 "The US Economic Crisis ; Causes and Solutions, 2009"라는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은행 국유화를 주장. "정부와 대중 입장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잔인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①일정한 방식으로 금융 자본가에게 구제 금융을 하는 것 ②보다 심각한 금융위기를 감내하는 것이라는 단지 두 가지 선택만 가능하다.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가 금융자본가들로부터 독립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유일한 방법은 정부 스스로가 경제주체들에게 주된 신용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즉 금융은 국유화되어 공공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Leo Panitch and Sam Gindin의 경우도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장과 사회적 심화는 금융혁신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금융을 공적 기구로 전환하여 현재 금융에 주어진 그 본질적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며, 은행 국유화에 대한 요구는 자본주의에 대한 체계적 대안의 필요를 구축하는데 있어 보다 발전적인 전략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Leo Panitch and Sam Gindin, 2009, "From Global Finance to the Nationalization of the Banks: Eight Theses on the Economic Crisis", Global Research, February 25, 2009)